

# 高學歷社會의 과제와 전망

金 容 淑  
(서울教育大)

최근 우리나라는 美國에 이어 日本과 함께 高學歷社會化에 따라 高學歷 인플레이와 과잉학력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高學歷社會의 근본요인은 學歷社會에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 동시에 금후의 고학력사회를 전망하며 아울러 教育이 投資的 성격에서 消費的 성격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1. 高學歷社會化의 충격

최근 계속되는 經濟不況으로 인하여 大卒者의 失業問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 각종 매스컴에서도 學士失業者가 10만 명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를 사회문제로 다루어 왔고, 한편 노동부의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大卒就業率이 '84년도 63.5%, '85년도 52%였으며 '86년도는 더욱 惡化될 전망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大卒失業者는 1986년도 졸업자의 경우 10만 명 이상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高學歷 인플레이 현상이 바로 우리의 목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작년 12월 10일에 발표한 「장기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에 의하면 현 수준으로 대학정원을 동결하더라도 앞으로 5년간 매년 3만 명씩 대졸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대규모의 大卒失業群이 형성될 전망이며 소위 고학력 인플레이가 심해 高卒까지 就業難이 가중될 가

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하여 高學歷社會化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고학력사회화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政府當局은 앞으로 大學定員을 동결하는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高學歷社會의 指標로서는 우선 大學生數 및 高等教育에의 취학률이나 취업자의 學歷程度 등이 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고학력사회임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198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人口 10만 명당 대학생이 2,680명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로 볼 때 美國 다음의 세계 제 2위라는 점에서 분명 대학생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다. 해방 당시의 인구 10만 명당 50명도 안 되었던 상황에 비교하면 엄청난 대학생의 증가인 셈이다.

또한 大學就學率을 보더라도 '80년도에 영국이 20%, 프랑스가 26%, 서독이 28%, 일본이 30%였는데, '83년도에 우리나라는 30%를 기록하여 美國 다음의 일본과 같은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就學率을 근거로 한 마틴 트로우식의 대학발전 단계에서 본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엘리트 단계를 '70년대에 거쳐 이미 大衆化 단계(대학 취학률 15~50% 이내)에 와 있으며 보편화 단계(대학 취학률 50% 이상)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就學率은 국민의 1인당 國民所得과 상관관계가 깊은데, 우리의 경우 국민소득은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高等敎育의 취학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大學敎育이 보편화를 지향하여 高學歷社會를 형성하고 있음이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1985년도의 金承鎬의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인 「한국의 과잉학력 현황과 과잉학력의 사회적 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졸 취업자의 55.6%가 고졸 정도의 교육 수준이던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高卒就業者の 42%, 中卒就業者の 8.9%가 각각 중졸과 국졸 정도의 교육 수준이던 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 같은 대졸 취업자의 과잉학력 정도는 美國의 37%(1978년), 日本의 38%(1979년)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전체 인구당 대학생수나 과잉학력 정도를 보면 분명 우리 사회는 高學歷社會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大學까지 졸업하는 데 드는 교육비가 2천 3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졸업하고도 失業者가 된다면, 그것도 한 해에 10만 명 이상이나 배출된다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과잉학력자가 美國이나 日本보다 많다면 분명 高學歷社會化는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根本的인 검토와 아울러 그 원인에 대한 分析과 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高學歷 인플레나 과잉학력 현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고질화된다면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사회 不安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일찌기 美國의 신진 경제학자인 프리만(R.B. Freeman)이 교육과잉인간(Over-Educated man)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高學歷者들이 그들의 학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얻지 못함에 따라 사회 체제에 불만을 갖고 정치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학력사회의 진행으로 빚어진 고학력 인플레는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기 마련이다.

이미 우리는 自由黨 末期에 무분별한 대학 확대로 失業者의 1/4 정도가 大卒者로서 상당수가 고등 롬뮈화하여 사회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다행히도 5·16 이후 高度經濟成長으로 전황이 바뀌었으나 만약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대졸자의 失業問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大學定員을 가급적 동결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과별 정원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며 대졸자의 일자리를 위하여 고용 창출 기업에 세계상의 특례를 마련함은 물론 임금 억제제를 하면서 고용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만으로 오늘의 고학력 인플레 현상이나 과잉학력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졸자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高學歷者를 우대하게 됨으로써 高學歷社會를 촉진하는 꼴을 범하게 될 경향마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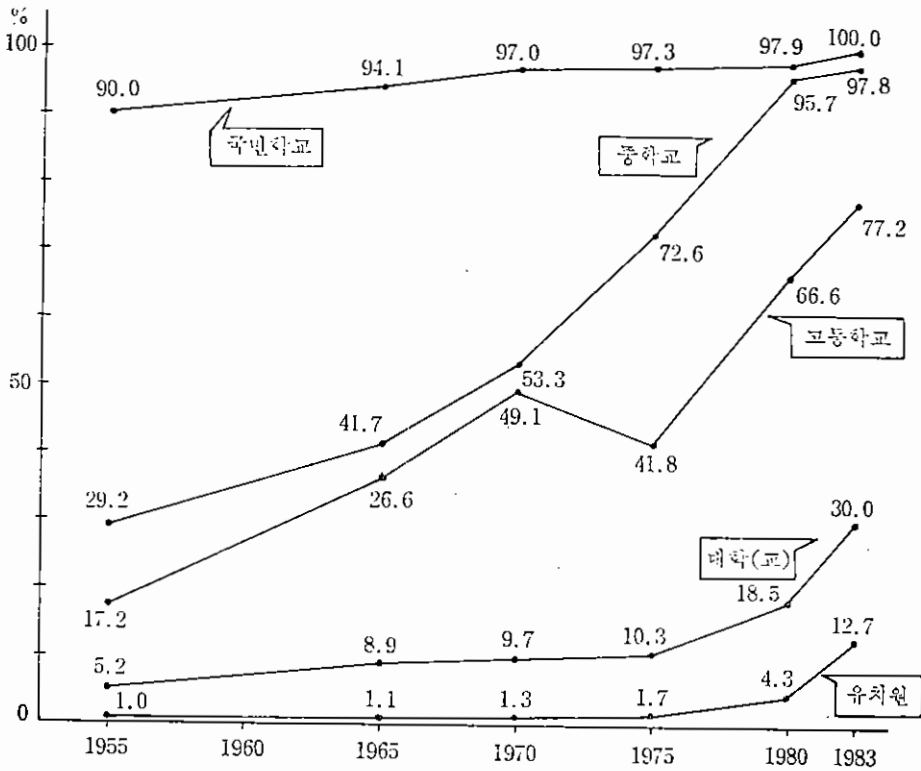
따라서 고학력사회를 형성하게 된 근본 요인부터 分析해 보아야 하겠다. 특히 경제 성장의 변수에 영향을 받아 잘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 인력수급계획으로서의 量的인 대응책보다는 고학력사회에의 質的인 면에서 대응책과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高學歷社會의 충격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학력사회의 形成要因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 2. 고학력사회의 形成要因

우선 우리나라의 각급학교 就學率(1955~1983)을 보면 <그림 1>과 같이 大學의 就學率은 유체

〈그림 1〉 학교급별 취학률의 추이(1955~1983년)



자료 : 한국의 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 1984, p. 19.

〈그림 2〉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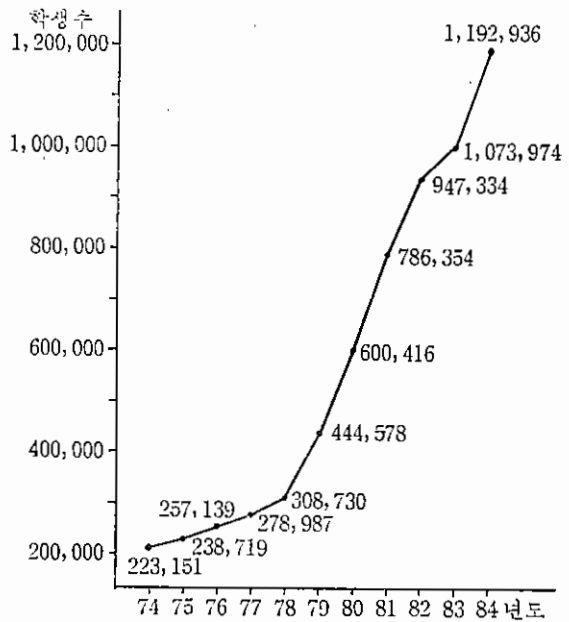
원의 그것과 함께 1980년경부터 급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에 大學就學률이 5.2%에서 10.3%로 약 2배로 증가한 반면에 1975년부터 1983년까지 10년도 안 된 기간에 대학 취학률이 약 3배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1980년부터 1983년 사이에 11.5%나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74년 이후 高等教育人口의 증가 상황을 보면 〈그림 2〉와 같이 1978년 이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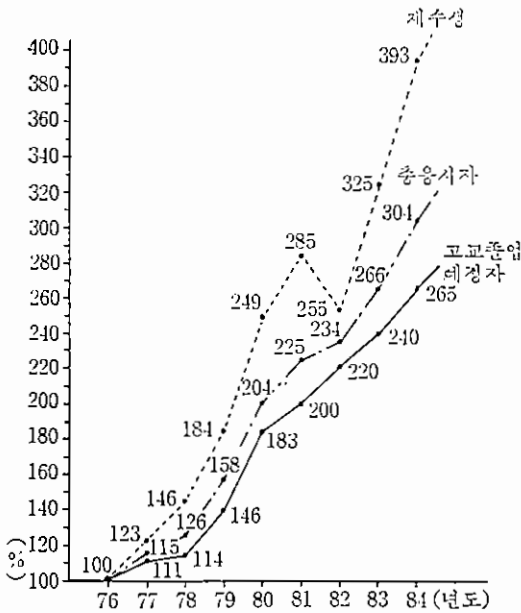
이같이 大學教育人口가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재수생의 누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등장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도 7·30 조치에 의하여 大學의 인구가 대폭 확대될 때의 주요인인 바로 누적된 재수생의 문제와, 과열과외로 인한 제 문제의 해결이 있을 정도로 재수생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자료 : 문교통계연보, 1984.

〈그림 3〉 연도별 재수생 증가 상황



문제였던 것이다.

재수생의 문제를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정책으로 풀어 가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졸업정원제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一石二鳥의 效果를 얻으려고 대학의 인구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결국은 大學定員만 증가시킨 셈이 되었다.

따라서 대학정책의 빈곤 또는 合理的 人力需

給計劃의 부재 등으로 대학인구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결국 오늘의 高學歷社會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인 要因은 오히려 고학력의 절대적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高學歷이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重視되고 있다는 사실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림 4〉와 같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학력간의 임금 격차는 물론이요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서도 고학력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며 특히 인간 평가에 있어서 能力이나 人格보다는 학력이 지나치게 중시되는 소위 학력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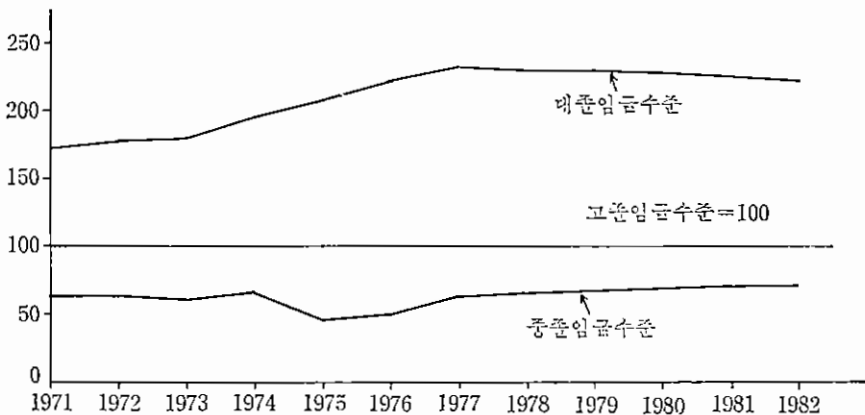
더구나 같은 레벨의 學歷이라 할지라도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를 따져 우대하는 學閥中心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最高의 學歷과 名門의 學閥을 얻기 위하여 대학 특히 名門大學 입구의 通行증을 얻으려 하며 당해년도에 기회를 얻지 못하면 다음해에까지 기다리는 소위 재수생이 급증하기 마련이다.

이같이 본다면 高學歷社會의 근본 형성 요인은 바로 學歷과 學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고학력사회에의 對應

물론 고학력사회의 형성 배경으로는 고도산업사회의 진전, 국민소득의 증대와 평등사회의 실

〈그림 4〉 교육정도별 임금 수준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83).

현 등의 제 요인을 들 수 있다.

고학력사회의 진전 자체는 억제할 수 없는 方向이기도 하며, 오히려 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고학력사회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문제는 고학력사회가 교육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경제성장의 정체는 물론이요, 공채와 같은 고학력 인플레이 문제와 과잉학력으로 인한 사회 불안 등을 수반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高學歷인플레이를 억제하고 과잉학력에 따른 문제만 해결한다면 고학력사회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결국 양적인 고학력사회 자체보다는 질적인 면에서의 고학력사회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고학력자들이 고학력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하는 점이다. 學歷이 學力을 보증하고 나아가서 學歷이 현실적인 직업 수행능력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어서 직업에서의 생산성을 보증할 수 있다면 고학력사회화는 바로 사회발전을 보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량생산 체제를 지향하면서 양적인 팽창속의 질적 저하라는 교육의 위기적 상황마저 논의되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둘째로, 프리만(R.B. Freeman)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과잉사회는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수익이 종래에 비추어 철저히 저하된 사회이며, 이미 敎育은 최고에 달한 산업으로서의 유리한 투자 대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學校敎育이 지금까지는 소비적 성격을 갖기보다는 지나치게 투자적 대상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입신출세의 수단화됨으로써 敎育 본래의 목적보다는 사회 선발의 기능이 지나치게 중시되어 왔다. 그래서 학교가 학력 획득의 장이 됨으로써 수험체제의 교육, 과외공부, 재수생 문제 등으로 학교교육이 왜곡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84년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대학 진학 이유는 '취업'이 34%, '소질 개발'이 27.3%, '사회적 대접을 받기 위하여'가 19.9%로 나타났는데, 적성이나 능력 개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교육 본래의 목표인 '자아 실현'이 27.3%에 불과했다.

'83년도 리쿠르트지에 의한 대학생 의식구조

조사에서도 大學에 다니는 目的이 '직업과 생계 안정'이 43.5%였는 바, 대학교육과 직업이 너무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일본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경제 즉 직업과 밀착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도록 충고한 바 있거니와 우리의 敎育도 지나치게 사회적인 직업과 밀착되어 있다. 學歷과 직업이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고학력사회가 형성되기 마련임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의 변수와 함께 고학력 인플레이와 과잉학력 문제는 수반되기 마련이다.

앞으로 고학력사회화에 따른 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바로 교육과 직업과의 밀착된 관계를 완화하고 敎育을 투자적인 性格이 아닌 소비적 성격으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學歷을 지나치게 사회적 선발의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서구에서는 사회적 선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學歷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卒業한 후에도 업적에 기초한 엄격한 선발이 能力主義라고 하는 형태로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제도화되고 있다. 그것은 經歷給이 아닌 能率給이 보편화되어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學校敎育이 사회적 선발의 거의 유일한 메카니즘이 되어 있으며 거의 학력계층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學歷의 등급에 따라 층위의 대상이 다르다.

이 같은 결과 대학에의 진학률이 국민소득에 비하여 높고, 그래서 고학력사회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 4. 今後의 課題와 전망

이미 主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학력사회는 야누스처럼 明과 暗, 즉 효용성과 병리성을 동시에 지닌 社會이다. 고학력사회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文化向上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고학력 인플레이와 과잉학력이 社會問題를 유발하여 오고 있음 또한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당국은 대학 진학률이 선진국에 비교하여 높은 데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여 취업난

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대학정원을 동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둔화되는 반면에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고학력사회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이처럼 불 같은 국민들의 교육열을 어떻게 냉각시키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한국일보와 한국갤럽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의 대부분(91%)이 자기 아들이 大學 이상을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대학원까지 마쳐야 한다는 기대는 절반 가량(48.2%)에 이르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문제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自己能力을 발휘할 수 있는 서구사회와 같은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고학력への 지향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정부당국의 대학정원의 동결로 대학에의 진학률은 둔화될지 모르나 대학입시는 더욱 격화되고 재수생은 더욱 누적되어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력간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高卒者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상황은 다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高卒者들에게 허용되었던 Blue-Color 직종이 大卒者에게 점유된다면 오히려 실직기간 유예의 한 방법으로서 大學入學을 택하게 될 것이다. 마치 최근에 大學을 나오고도 일자리가 없

으므로 일단 일자리가 있을 때까지 大學院에 진학하려고 하는 傾向과 같다. 한편으로는 大卒者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서 직종에 관계 없이 소위 하향취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의 입시는 더욱 더 치열하여 학벌주의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저학력자들의 대우 문제나 과잉학력 취업자들의 의식구조상의 문제 등이 앞으로의 고학력사회에서 대응해야 할 課題들이다.

그러나 教育投資가 매력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對象으로서가 아닌 소비적인 生活의 한 과정으로서 이루어짐으로써 教育 本來의 가치에 충실하게 된다면 高學歷社會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수반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自體가 문제될 것도 없을 것이다. 學歷과 職業의 분리현상이 이루어져 학력은 취업에 있어서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人間形成의 한 과정이나 결과로서 인식될 때 學校教育은 正常化될 뿐만 아니라 高學歷이나 과잉학력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를 다녔다는 이력에 불과한 學歷이 바로 인간을 선발하여 직업이나 사회계층에 배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학력사회가 구체적 능력이 평가되는 多元的인 능력사회로 변화될 때 고학력사회는 오늘 우리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사회문제의 原因으로서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高學歷社會야말로 情報社會의 형성과 우리 사회의 發展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